민주 김은경 혁신위원장 임명

당 내선 '기대 반, 우려 반'

혁신기구 출범 기대 속 전권 부여에는 부정적
비명계는 혁신기구서 이재명 체제 토론 주장

더불어민주당의 혁신기구 책임자로 임명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정치와 연이 닿아 있지 않아 새로운 개혁의 성과를 만들어 낼 것이란 기대와 함께 친명과 비명(비이재명) 계파 구도 속에서 중심을 잡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김 교수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분이라는 평가가 조심스럽다"며 "하지만 어려운 시기에 어렵게 모셔왔으니까 위기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치권을 잘 모르는 분이 계파 갈등 속 당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 "혁신의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며 "여의도 시각이 아니라 국민 시각에서 판단하고 실천하면 저는 혁신위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고위원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 교수님은 금감원 금융소비자 부원장으로 상당히 어떤 역할을 톡톡히 했던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소비자 보호에도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던 것 같다"고 했다.

장 의원은 "혁신기구는 기본적으로 기득권 타파, 정치윤리 강화, 당내 민주주의 강화, 여러 가지 대표성 확대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위원장의 의중과 위원들의 구성에 따라서 우선순위는 조금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명계에서 혁신기구에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장 의원은 혁신기구에 전권을 주는 것이냐는 질문에 "전권이 갖는 의미를 잘 모르겠다"며 "(혁신기구에서) 제안을 하시는 것 만으로도 아주 큰 권한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이 대표 극렬 지지층을 겨냥해 방탄정당과 팬덤정당 불신 해소를 촉구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혁신기구의 과제에 대해 "일단 1번이 기득권 방탄 정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떨궈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런 문제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정당이라는 걸 단호하게 보여줬어야 되는데 미적미적하면서 기득권 방탄 정당이라는 국민들의 불신이 쌓여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팬클럽이 정치를 좌우하거나 정치인을 좌우하게 되면 국민들이 신뢰를 주지 않는다"며 "지금도 민주당은 비민주적인 팬덤 정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8월 말까지 지난 1년과 나머지 총선까지 1년을 전망해보면서 지금 이재명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 또 바뀔 의지가 있는지 심도 있는 토론을 한 번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혁신기구에서 이런 논의가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나와야 한다"며 "국민들이 다 지금 기다리고 있거나 궁금해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그냥 넘어가는 것은 혁신위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뉴시스

"8월 새만금 잼버리에서 만나요"

지난 17일 부안 잼버리행사장에서 전북도·전북연맹·조직위 합동으로 세계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미니잼버리가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가 폐영식에 참가해 현장점검 및 성공개최를 다짐하고 있다.

농기계산업 육성·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김희수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기술 상용화 등 지원 규정

전국 최초로 농업기계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3일 해당 상임위(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도내 농기계 매출액은 2조 6,833억 원이며, 수출액은 4억4,669만불로 전년 대비(2억9,840만불) 49.7% 가량 상승했다. 그러나 도내 농기계 생산업체 중 LS엠트론, TYM 등 완성차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이 영세한 부품업체(146개)로 농기계 산업 육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김 의원은 "이미 도내에는 농기계 관련 연구기관이 있어 첨단기술 개발이 유리하고, 김제·익산·완주 중심으로 입지적 우위성이 확보돼 도내 농기계산업을 육성하고 농기계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촉진 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는 5년마다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농업기계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관련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공립 연구기관 및 도내 출연·출자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업기계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동향 및 수요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기계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산업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력수급이 어려운 가운데 농기계의 도입은 필수적인 요소인데 도내 농기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농업기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유형별 재생정책 별도 수립·시행을"

도의회 도시재생연구회, 노후 공동주택 재생방안 모색 세미나

전전북도의회 도시재생위원회(대표 윤영숙 의원)는 지난 16일 의원총회의실에서 노후 공동주택 재생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임정민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30년 이상 공동주택이 중소도시 전체 가구의 20.4%에 해당되지만 사업성 등을 이유로 재건축이 어려운데다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소도시에 맞는 맞춤형 노후 공동주택 재생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공동주택의 유형별로 관리 및 재생정책을 별도로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는 부산 영주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정승창 사무국장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될 정도로 노후된 부산 영주동 영주아파트와 시민아파트의 재생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정승창 사무국장은 "오래된 아파트를 재건축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너무 많은 이권개입으로 정작 입주민들의 주거권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재생이든 정비든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공동주택지원센터를 통한 공공의 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북도 노후 공동주택 관리 방안에 대한 발제를 진행한 오병록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북의 경우 2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 비율이 전체 아파트의 절반정도인 49.8%를 차지, 전국 평균 40.3%보다 약 10% 정도 높은 편이다. 법적으로 의무관리가 아닌 아파트인 경우 대부분 시설과 커뮤니티면에서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노후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전북도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개설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 관리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 노후 공동주택의 노후도를 늦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숙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은 도시경관, 지역사회 활력도, 부동산 가격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도시재생 영역에서 공동주택을 배제해 온 만큼 지금부터라도 노후 공동주택 관리 및 재생 분야 정책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관련 조례 제개정과 정책 건의를 통해 도정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진안군의회 정례회 폐회

회계연도 결산 등 안건 의결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제284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 의안 상정에 앞서 손동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박피해 농가의 지원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했으며, 이미옥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피해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12일과 13일 양일간 상임위원회를 열고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5건의 안건을 각각 심의·의결 했으며, 14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김민규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 진안군의회도 군민여러분의 삶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일을 꼼꼼히 챙겨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도의회 예결특위, 문체관광국 등 소관 결산 심사 실시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 전주2)는 16일 문화체육관광국, 복지여성보건국, 환경녹지국 등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먼저, 진형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2)은 예산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와 관련하여 목표치를 비현실적이고 형식적으로 설정함으로 인해 무의미한 자료로 전락한 것을 지적하고, 향후 적절한 성과목표가 성과보고서에 반영되도록 주문,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들의 개선 권고 및 지적사항에 대해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또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마약중독지원' 사업과 관련, 최근 급속히 확산된 마약사범 증가와 청소년 마약 문제 등을 언급하며, 보건정책에 마약퇴치 및 예방 홍보에 관련 예산확대 등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당부했다.

한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은 예산의 성과보고서와 관련, 성과계획서 수립 시 실질적으로 도정이 목표한 성과가 잘 연계되어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하고, 초과달성 지표 및 미달성 지표에 대해서는 전년도 실적이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원인분석을 통해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요구했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1)은 농어촌지역 공중보건의사 지원이 줄어드는 사유를 물으며, 농어촌지역의 경우 의료인력 부족이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임실군의회 정례회 폐회

임실군의회(의장 이성재)는 지난 16일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2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임실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1건의 조례안과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임실 치즈아이랜드 조성안, 세계명견테마랜드 조성안, 요산공원 편의시설 건립 변경안, 농촌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안), 동의안 2건을 의결·처리했다.

이성재 의장은 제9대 임실군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아 폐회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우리 임실군의회에 무한한 관심과 신뢰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하다."며 "더 나은 방향으로 임실군민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군민 여러분의 지지와 참여,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